

한국당, 대통령과 '1대 1 회담' 고집

문대통령, 취임 2년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4당 수용 靑 "1대 1 형평성 안맞아" 난색... 4당 "조건없이 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이 자유한국당의 '일대일 회담' 역제안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다음 날인 지난 10일 여야 5당 지도부와 접촉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과의 회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회담 대신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여야 4당 대표가 회담을 수용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일대일 회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야 대표 회담 의제를 당초 대북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한국당의 요구처럼 국정 전반으로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당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담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을 둘러싼 이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교착 국면을 면치 못하는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향해

'조건 없는 회담 수용'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회담 의제와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만 만날 것을 주장하며 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아무 조건 없이 회담을 열어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 답해야 한다"고 "황 대표의 일대일 방식을 주장하며 뽀니를 부리지 말고 조건 없이 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기를 원한다"며 "황 대표의 일대일 방식 주장은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

고이자,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황 대표가 주장하는 일대일 방식보다는 여섯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방식이 검색된 정국을 푸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지려면 일대일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에는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보여주기식 다자회담이 아닌 실질적 논의가 오갈 수 있는 양자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정청 "추경·민생현안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먼저 "민생이 어렵다거나 산업현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과 산업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는 다수 국민의 바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의했고 야당도 원칙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빨리 대화 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돼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라며 "유치원 3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활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에 더 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들어간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부처님 오신 날 한자리 모인 여야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누가되나

문무일 임기 두달여 남아... 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후보추천위 구성 시기는 예년보다 다소 이른 편이다.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58) 검찰총장의 임기는 75일 남아 있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임기(2년)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다.

오는 7월 말부터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봉옥(19기·54)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19기·54) 법무연수원장, 김오수(20기·56) 법무부 차관, 이금로(20기·54) 수원고검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윤석열(23기·59)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을 점치기도 한다. 다만 현재 검사장급인 윤 지검장이 총장 자리에 오르고 오랜 관행을 따라 연수원 19~23기 간부들이 전부 옷을 벗을 경우 검찰 조직에 극심한 동요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차차기' 주자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연합뉴스

野 원내 지도부 교체... 대화 물꼬 트일까

평화당 오늘·바른미래 15일... 추경 고리 국회 정상화 관심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번 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 지도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교착 국면에 놓인 국회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결정한다.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등 두 재선 의원으로 후보군이 좁혀진 상태며, 합의추대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평화당은 13일 3선 유상엽 의원과 재선 황주홍 의원의 2파전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평화당까지 원내사령탑이 바뀌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취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분주히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소집되면 5월 임시국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국회는 아직 소집요구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난달 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추경이 6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타이밍'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 착수를 호소했다.

오는 29일에는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까지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예결위 구성 기간과 겹쳐 국회 의결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여야 모두 강원 산불, 포함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번 추경에 경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대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함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 그러나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재정 투입 역시 시급해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재해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야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로 나오시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일부 양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조건 원안 고수'보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듣고 협상의 여지를 넓혀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한국당과의 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리운지

"국토부, 천사대교 인접도 3차선 확장 약속"

박지원 평화당 의원

지난달 4일 천사대교 개통 이후 생긴 인근 도로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박지원(목포) 의원은 지난 12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천7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나 늘어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은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도-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7 12point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문의 1566-9988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